

< 要 約 >

I. 미 통상 대표부(USTR)의 97년 貿易障壁 報告書(NTE)

- (무역 장벽 보고서의 성격과 重要性)
 - 미통상대표부(USTR)이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국가별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로서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이를 기준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97년 한국 관련 무역 장벽 보고서의 背景)
 - 96년 무역 장벽 보고서 후로 실질적인 장벽,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불만 고조
 - 96년 가을 이후 한국의 과소비 추방 캠페인에 대해 이를 수입 억제 운동으로 파악하여 WTO, OECD, 미국측에서 문제시
- (97년 한국 관련 무역 장벽 보고서의 特長)
 - 예년보다 더 세부적으로 사실상의 장벽을 문제시
 -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행정 규제, 내부 규제등은 외국인 투자, 기업 활동 전반에 장벽
 - 정부조달중 특히 통신시장에서 외국통신업체에 대해 사실상 비밀보호 조치가 결여
 -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의 수입절차, 검사 및 통관 제도가 불투명하고 비과학적인 「사실상의(de facto) 차별」을 문제시
 - 사실상의 장벽과 연계하여 전반적 수입품에 대한 반감 (General Anti-Import Biases) 형성을 문제시했으며 한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 근검절약 운동은 언론과 정부 주도하에 사실상 소비재 수입 억제정책이라고 간주
 - 문서화되지 않은 외국 통신 기기 불매(buy local) 경향을 문제시
 - 외국제품의 광고 제한은 외국 제품에 대한 친밀감 형성을 억제

II. 주요 분야별 통상현안

- (輸入정책)
 - 수입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불투명하고 자의적 장벽 존재
 - 주류 및 수입차에 대한 높은 실효 관세
 - 통관 절차, 검사, 검역 및 상표, 포장 의무의 불투명성, 비과학성, 恣意性

○ (자동차)

- 한국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 간주하고 한미 자동차 협상의 양해 각서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요구
- 수입차에 대한 反輸入 운동이나 수입차 리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양해 각서 위반
- 자동차 수입관세율, 배기량 기준 누진과세, 판매금융제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양해각서를 올해중 도출할 것임을 시사

○ (정부조달과 통신)

- 정부의 통신산업 진흥 정책과 이동 통신 개방 지연으로 작년 7월 이후 미통상법 1374조하에 통신분야 「우선 협상 대상국」 지위 유지
 - 1년 협상 시한 후 한국 통신기기 불매, 보복관세 등 통상제재 가능
 - 97년 3월 USTR이 발표한 통신 시장 개방 타겟 4개국에 멕시코, 대만, 일본과 함께 한국 포함
- 96년과 97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정부조달중 통신시장에서 외국통신업체에 대한 과도한 형식승인, 사실상 비밀 보호 결여 및 암묵적인 외국 통신 기기에 대한 불매(buy local) 문제시
 - 민간조달에서도 외국제품을 차별하는 정부의 영향력 작용 우려

○ (지재권과 의약품)

- 지재권 관련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 불만 및 WTO의 무역관련 지재권 협약(TRIPs) 이행 불충분
- 의약품 관련 비밀 보호, 시장 접근에 문제 있음
- 그간의 지재권 노력을 인정하여 97년 4월 30일 지재권 관련 우선 관찰 대상국(PWL)에서 관찰 대상국(WL)으로 하향 조정

○ (소비절약 운동과 반수입 정서)

- 반 수입품 정서 문제는 수입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미국과 EU 등이 동시에 문제시

III. 통상마찰의 전망과 과제

○ (雙方의 입장)

- 미국은 對韓貿易逆調에도 불구하고 通商壓力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 무역 집계 방식 차이로 한미간 무역역조에 대한 견해차
 - Clinton행정부는 의회의 자유무역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쌍무적 강경자세로 무역 흑자 유지 필요

- WTO와 OECD에서 소비 절약, 자동차 시장 문제 등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미국의 리더쉽 발휘 바람직함
- 통신, 자동차는 미국내 관련 업계의 강력한 시장 개방 로비 분야
- 한국은 OECD 가입후 경제난과, 기존의 개방 일정, 대선 등의 이유로 통상압력에 굴복하기가 어려움
- 통신 시장은 정책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분야이며 기본 통신 협정과 정보 기술 협정상의 개방 일정이 이미 제출된 상태
- 국내차 판매는 작년에 20.8% 감소한 가운데 수입자동차 판매는 9.3% 증가
- (向後展望: 概觀)
 - 한미 통상 현안은 쌍무적 차원 중심으로 다루어질 전망이고 소비절약운동, 자동차, 통신, 지적권분야 순서로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優先順位 분야 전망)
 - 소비절약운동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EU 중심의 쌍무적 협상주제나 OECD 및 WTO차원의 주제가 될 것임
 - 지적권분야는 97년 4월 30일 지적권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우선 관찰 대상국에서 관찰 대상국(WL)으로 전환되었으나 의약품의 시장 접근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될 것임
 - 통신과 자동차분야는 의회 로비 압력도 가장 크고 미국내 경쟁 기업과 통상 기구에 의해 최우선 개방 대상국으로 한국이 이미 지명된 상태임
 - 통신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가장 통상 마찰이 크게 예상되는 분야이고, 자동차 시장 개방은 한국측의 명분이 희박하여 양보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분야
- (對應課題)
 -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소비 절약 운동이 수입 반대 운동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과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 표명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소비절약 운동을 정부가 묵인한다는 인상을 제거하고 소비 절약 운동이 수입차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강조
 - 통신, 자동차 국내 시장에 대한 공격적 개방에 대비한 국내외 시장 전략의 수립 필요

I. 美通商代表部の 97년 貿易障壁 報告書

- (무역장벽 보고서의 성격과 重要性)
 - 미통상대표부(USTR)이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국가별 무역 장벽에 대한 보고서로서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는 이를 기준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97년 한국 관련 무역 장벽 보고서의 背景)
 - 96년 무역 장벽 보고서 이후로 실질적인 장벽,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불만 고조
 - 96년 가을 이후 한국의 과소비 추방 캠페인에 대해 이를 수입 억제 운동으로 파악하여 WTO, OECD, 미국측에서 문제시
- (97 무역장벽 보고서의 특징)
 - 예년보다 더 세부적으로 사실상의 장벽을 문제시
 - 「사실상(de facto) 장벽」을 더욱 강조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반적 수입품에 대한 반감(General Anti-Import Biases) 고취를 문제시켰으며 한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

1. 무역 장벽 보고서의 성격과 중요성

USTR이 해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NTE 보고서를 기준으로 후속 통상 논의가 이루어짐

- 무역장벽 보고서의 성격
 - 「88무역 종합법」에 의거 美通商代表部(USTR)에서 매년 3월말까지 각국의 통상 장벽에 대한 현황 보고를 작성하여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 동 보고서 (97년 현재 12차)는 연방 정부의 각 부처와 해외 주재 미 대사관에서 수집한 미 민간 업계의 불만 사항을 참고로 작성
- 무역장벽 보고서의 중요성
 - 동 보고서를 기본으로 USTR의 주요 후속 협상이 논의됨
 - Special 301조에 따른 지적 재산권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4월 30일 시한)

- 정부 조달 불공정 관행국 지정(4월 30일 시한)
- Super 301조 우선 협상 대상국 관행 지정(9월 30일 시한) 및 이를 토대로 후속 협상 계속

2. 97년 한국 관련 USTR 무역 장벽 보고서의 배경

작년 NTE 보고서 이후 실질적 장벽, 지재권, 통신이 이슈화. 97년에는 수입 억제 정책 및 한보문제 추가 이슈화

- 작년 96년 무역 장벽 보고서는 통관, 표준 및 검역에서 공식적인 장벽은 진전을 보이나 실질적 장벽이 있음을 지적
 -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규정, 통보 불이행이 문제
 - 방송, 금융등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장벽문제 제기
 - 또한 통신분야의 정부조달에서 과도한 형식 승인 서류, 영업비밀보호 부족, 실질적 국산품 구매 정책의 문제 제기
- 92년에 이어 연속 5년간 96년 4월 (Special 301조에 의거) 지재권 관련 우선 관찰 대상국(PWL) 9개국중 하나로 지정
 - 한국측은 이 조치가 일본, EU와 함께 지재권 보호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
- 96년 7월 26일 USTR은 미 통상법1374조에 의거 한국을 통신 관련 우선 협상 대상국(PFC) 지정
 - 96년 3월 무역 장벽 보고서에 지적한 통신 문제에 대한 협상 결렬의 결과
 - PFC 지정 후 12~18개월의 협상 시한후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 보복조치 가능
- 과소비 추방 및 소비 절약 운동 작년부터 각국이 문제시
 - 소비 절약 운동은 작년 9월 말 WTO 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정책 검토 회의 (TPRM)에서 각국이 가장 문제시한 부분으로 미국은 다자간, OECD, 쌍무 차원의 항

의를 계속해왔음

- 소비 절약 운동은 한국 정부 주도의 소비재 수입 억제 정책으로 간주 이는 WTO 협정 위반
- 지난 2월 OECD 무역 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의 소비 절약 운동 문제시
- 지난 3월 10일 내한한 손 머피 USTR 아태지역담당관은 기업의 통신장비 수입, 수입 승용차 리스, 기업의 소비재 수입, 원유 수입, 유학생 등에 대하여 정부가 세무 조사, 실태 조사,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는 데 항의

○ 한보 보조금 문제

- 97년 2월 미국의 철강 회사들이 미국 정부에 대해 한보 지원 문제를 미국이 WTO에 제소할 것을 청원
- 1995년 7월에 2년 시한으로 성립한 한미철강협의를기구를 통해 작년에 한보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한국측은 협의 회피
- 한보 파산 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보 거래사와 납품업자에 5조 원 이상 지원을 약속했는데 파산한 기업에 거액의 운영자금 보조는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며 상업성이 없는 생산 시설에 퇴출을 막는 정책은 OECD 회원국 의무 위반
-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하면 정부 보조가 매출의 5%를 초과할 경우 보조금이 해외 경쟁 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았음을 입증할 의무가 한보측에 있음
- 미국의 강철 생산회사 Geneva Steel, Gulf States Steel, Weirton 과 강관수입위원회(Committee for Pipe and Tube Imports) 가 지난 2월 공동으로 제소 요청
- 이들은 미국의 열연 강관 수출이 95년 40만 톤에서 96년 4만 톤으로 격감했으며 이는 한보가 작년에 새로 정부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운영 보조금으로 철강 생산을 倍加한 불공정 무역의 결과라고 주장

3. 97년 한국 관련 무역 장벽 보고서의 특징

97 NTE 보고서는
사실상 장벽과 이
에 연계하여 반수
입품 정서 문제,
한보문제 언급

- 사실상 장벽이 더욱 강조
 - 법률적 장벽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사실상의 장벽이 더욱 강화된 경우도 있음을 문제시
 - 농수산물, 식품, 의약품에 대한 수입절차, 검사 및 통관 제도에 의한 사실상 차별 문제시
 - 외국인 투자, 기업활동 전반에 각종 행정 규제, 내부 규제 등은 불투명하고 자의적 장벽
 - 정부조달중 특히 통신시장에서 외국통신업체에 대한 사실상 비밀보호결여 및 문서화되지 않은 외국 통신 기기 불매(buy local) 문제시
- 전반적 수입품에 대한 반감(General Anti-Import Bias) 문제시
 - 자동차 등 외국 제품에 대한 전반적 반감 고취 문제 제기
 - 근검 절약 운동은 사실상 언론과 정부 주도하에 소비재 수입 억제정책으로 간주
 - 외국제품 광고에 대한 각종 제한은 외국제품에 대한 친밀감 형성을 억제
 - 한국측은 수입제품에 대한 반감이나 근검절약 운동은 민간 자발적 운동임을 강조해왔으나 미국측은 전통적인 정부 주도형 또는 정부 묵인하의 캠페인으로 간주
- 한보 문제 우려 표시
 -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는 짧게 우려만 표시
 - 미국의 강철 업체는 지난 2월 미국 정부에 대해 한보 지원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을 청원
 - 한미 철강 협의 기구를 통해 우선 협의 진행 예상

<표1> 96년과 97년 무역 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비교

분야	1996	1997
수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와 과세의 결합으로 농산물, 주류, 차량 실효 관세가 높음 ▶통관절차가 지나치게 느림. 검사, 표준, 상표부착요건이 불필요하게 강하거나 비과학적. 사전통지없는 절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관세 하향. 주류, 차량실효 관세 여전. 정부의 반덤핑관세 적용 증가 주목 ▶수량제한문제 완화. 단 정부가 아직 미국산 쌀의 시장접근 제한 ▶반 수입 운동과 연결되어 자의적인 통관절차 강화, 사전통지없는 관세분류 변경
표준, 검사, 상표부착요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투명하고, 비과학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무역장벽임.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제가 비과학적. 의약품의 비밀 보호 부족 추가. 의약품의 수입 승인 지연. 자동차에 대한 안전 및 배기 가스 기준의 불합리성 추가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산부에 의한 직접 통제 없어짐. 1992년 한미 통신 협정 미준수. 형식 승인 요구 과도. 영업 비밀 보호 부족. 사실상의 국내조달 우선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식승인, 영업비밀보호, 사실상 국내 조달문제 반복. 1996년 7월 통신관련 우선협상국 지정. 외국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지급 불인정문제 추가 (지재권분야에서 정부조달 분야로 이동)
수출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축소중. 조선보조금문제 언급. 단 한국의 OECD 조선 협정 가입 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지재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재권보호는 어느 정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 정도가 빨라짐. 단 소급보호, 개인용 불법 복제, 영업 비밀, 산업 디자인 보호 미흡. 지재권보호에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서비스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수입 금지 품목 주목 (우편, 외국어 교육, 케이블 TV, 보험) ▶TV방송에 외국 프로그램 방송 제한, 외화에 대한 스크린 쿼타 ▶금융산업접근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통신분야의 전면개방 지연으로 1996년 7월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TV 라디오 광고시간 배정문제 완화. 단 의약품 광고 제한 여전.
투자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투자에 법과 행정규제 여전. 등록, 심의, 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아직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 신고 및 토지 소유 제한 완화. 아직 열악한 환경
반경쟁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협회, 화장품 협회등 산별 협회의 외국 기업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주목. ▶산별 협회의 외국 기업 차별 여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증, 광고 제한, 할부금융, 반감 문제 언급 ▶외국 비데오 프로덕션 부재. 케이블 TV에 대한 규제 과도. ▶철판가격정책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국내 통신업체 조달경향 추가 ▶일반적 반수입품정서 문제 추가. 정부의 불관여 주장은 의심스러움 ▶수입차 리스에 대한 세무조사 ▶비데오 부문 없어짐 ▶한보문제 우려

II. 主要分野別通商懸案

○ (輸入정책)

- 수입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투자, 기업 활동 전반에 불투명하고 자의적 장벽 존재
- 주류 및 수입차에 대한 높은 실효 관세
- 통관 절차 및 상표, 포장 의무의 불투명성, 비과학성,恣意性

○ (자동차)

- 한국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 간주하고 한미 자동차 협상의 양해 각서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요구
 - 수입차에 대한 反輸入品 운동이나 수입차 리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하는 양해 각서 위반
- 자동차 수입관세율, 배기량 기준 누진과세, 판매금융제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양해각서를 올해중 도출할 것임을 시사

○ (정부조달과 통신)

- 작년 7월 이후 미통상법 1374조하에 통신분야 「우선 협상 대상국」 지위 유지
 - 1년 협상 시한 후 한국 통신기기 불매, 보복관세 등 통상제재 가능
 - 97년 3월 USTR이 발표한 통신 시장 개방 타겟 4개국에 멕시코, 대만, 일본과 함께 한국 포함
- 96년과 97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는 반복적으로 정부조달중 통신시장에서 외국통신업체에 대한 과도한 형식승인, 사실상 비밀 보호 결여 및 암묵적인 외국 통신 기기에 대한 불매(buy local) 문제시

○ (지재권과 의약품)

- 지재권 관련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 불만 및 WTO의 무역관련 지재권 협약(TRIPs) 이행 불충분
- 의약품 관련 비밀 보호, 시장 접근에 문제 있음
- 그간의 지재권 노력을 인정하여 97년 4월 30일 지재권 관련 우선 관찰 대상국(PWL)에서 관찰 대상국(WL)으로 하향 조정

○ (소비절약 운동과 반수입 정서)

- 반 수입품 정서 문제는 수입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미국과 EU 등이 동시에 문제시

1. 輸入정책

주류, 수입차에 대한 높은 실효 관세, 통관 문제 언급

- 관세 분야
 - 주류, 수입차 등 고급제품에 과도한 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가로 실효 관세가 높음
- 수량 제한
 - 농산물의 수입 제한은 쌀을 제외하면 양호한 편
- 통관
 - 통관 절차가 옛날보다 개선되었다가 다시 까다로워진 경우가 있음
 - 검사, 상표, 포장 규정이 비과학적이거나 국제 관례와 다르며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
 - 통관 분류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자의적임

2. 자동차

가장 폐쇄적인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수입 제한 캠페인은 양해각서 위반, 이행 여부 주목, 연내 갱신 내지 개정

- 한국 자동차 시장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 간주
 - 한국은 일본, EU에 이어 세 번째 자동차 수출국이나 1996년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5% 이하
- 1995년 자동차협상 후 양해각서(MOU) 교환
 - 수입차에 대한 시장접근을 증가시킬 것을 약속
 - 수입품 안쓰기 운동을 정부에서 전개하지 않을 것
 -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하
 - 용자 제한, 표준 및 인증 제한 완화
- 수입 제한 캠페인에 정부 묵인, 스포츠-유틸리티 카에 관세 인상은 MOU위반
- 외제차 리스사에 세무조사 위협은 MOU위반
 - 한국의 입장은 회사명의 리스차에 대한 개인 전용 조사 목적
- 최근의 외산차 수입 급감 우려
 - 미국측은 수입차에 대한 시장접근약속은 결과 위주로(result-based) 해석
 - 96년 7월중 한 달 1121대 수입후 최근 몇 달은 한 달

- 700대 이하로 격감한 데 우려
- 올해 중으로 양해각서의 이행 확인후 연장이나 또는 새로운 양해각서 도출 가능성이 큼

3. 정부조달과 통신

통신분야의 정부 및 민간 조달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대립

- 96년 무역장벽 보고서
 - 통신분야의 정부조달에서 과도한 형식 승인 서류, 영업 비밀보호 부족, 실질적 국산품 구매 정책의 문제 제기
 - 동일한 우려가 97년 보고서에서도 반복
- 96. 7.26 USTR은 미 통상법1374조(Section 1374 of 1988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의거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PFC) 지정
 - 96년 3월 무역장벽 보고서 후속 협상에서 미국측은 기본통신 사업 개방, 미국 위성 서비스의 시장 접근, 규제와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민간 조달에서 정부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협상 결렬
 - 12~18개월의 협상 시한후에 통신 관련 보복 관세, 수입 제한등 보복조치 가능
- 한국은 WTO 기본 통신협상에서 양허스케줄 제출
 - 규제에 대한 기준서(reference paper)를 받아들였으나 통신시설, 재판매,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함
- 한국은 97년 3월중 USTR이 발표한 통신 시장 개방 타겟 4개국에 멕시코, 대만, 일본과 함께 포함

4. 지재권과 의약품

- 92년에 이어 연속 5년째 96년 4월 30일 (Special 301조에 의거) 지재권 관련 우선 관찰 대상국(PWL) 9개국 중 하나로 지정
 - 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일본, EU와 함께 지재권보호에서 상당히 진전했음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
- 또한 정보기술협정(ITA)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

지재권 관련 개도국 지위 유지 불만, 지재권 보호의지가 아직 불충분하고 특히 의약품 관련 문제가 수년간 지속중

세 장벽 축소

- 그러나 97년 무역장벽 보고서는 지재권 관련 개도국 지위에 불만
 - WTO의 무역 관련 지재권조항(TRIPs) 의무에 관하여 OECD 국가로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
 - TRIPs 규정에 요구하는 50년 소급 저작권 불인정 문제
- 또한 정부의 지재권 보호 의지에 많은 문제를 제기
 - 불법 복제품, 불법 복제 직물 디자인 제작 및 수출에 정부의 근절 의지 약함
 - 95년 한국 세관이 포착한 불법 복제품은 45만 6천 불인데 미국 세관이 포착한 한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복제품은 5백십만 불
 - 사용하지 않는 등록 상표의 경쟁적 점유로 외국 기업에 불리
 - 산업 디자인을 정식 등록전에 보호하는 법규 부재
- 특히 의약품의 경우 실제적 영업 비밀 보호 (trade-secret protection)가 보장되지 않음
 - 사업 등록, 인허가에 필요한 제조방식, 내용물 등에 대한 사업 기밀 제출후 비밀이 유출됨
 - 수입 의약품은 표준, 인허가, 보험커버리지 등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음

5. 소비절약 운동과 반수입품 정서

수입 억제 및 반수입품 감정 문제는 수입에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로서 미국과 EU에서 문제시

- 반수입품 정서의 미국측 인식과 교역에 대한 효과
 - 수입품은 고가품의 경향이 있음
 - 정부 주도하에 전통적으로 소비절약과 반 수입품 정서 고취 운동의 역사가 있고 민간 운동이 시행상 정부의 허가를 통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소비절약운동 내지 반 수입품 감정은 자동차, 통신을 포함한 미국의 수출 노력에 전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 장래 수입 자동차 시장 지분 증가에 가장 큰 장애가 형식적인 관세뿐 아니라 수입차에 대한 반감이라고 생각함
- 정부가 암묵적으로 국산 통신기기 구입을 장려할 수 있는 기반도 수입품에 대한 반감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있음
- 97년 여름 소비절약 운동 이후 통관, 검역, 행정지도, 상표 및 포장 등에서 실질적인 장벽이 거꾸로 증가한 것도 전반적으로 현장 종사자들이 수입품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간주함
- 미국과 EU는 한국정부의 반수입품정서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노선 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
 - 한국정부는 수입품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국제 수지를 위해 반수입품 감정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
 - 그러나 선진국은 정부의 개방 정책에 명백히 대치되는 것으로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행정적 묵인을 제거할 것을 요구

<표2> 97년 한국 관련 무역장벽 보고서의 주요 불만 사항

수입정책	▶언론·정부가 묵인하는 소비절약 운동이 사실상 사치성 소비재 수입 억제 ▶외산자동차의 수입관세가 높고 누진과세 및 판매금융제한 등으로 수입억제 ▶정부가 쌀의 수입·유통·판매까지 통제, 미국산 쌀의 시장접근 제한
검사 통관제도	▶통관지연, 통관절차의 투명성 결여. 소비절약 운동 이후 자의적인 통관절차 강화, 사전통지없는 관세 분류 변경
정부조달	▶미국통신업체에 지나친 형식승인 요구, 영업비밀 보호가 결여. 국내 조달 우선
지재권 보호	▶지재권보호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함. 지재권의 소급보호 소극적
서비스 장벽	▶이동통신 분야의 전면개방 지연으로 통신분야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 ▶한국방송광고공사가 TV 라디오 광고시간 배정을 독점
금융 서비스	▶생명보험사에 개인 사고 보험 불허. 신상품 허가 지연. ▶해외자본 유입 제한. 금융관련 법규 및 절차 복잡. ▶외국증권사의 장외시장 참여 금지
투자장벽	▶외국인투자 신고시 회사기밀 등의 제출요구. ▶외국기업의 토지소유 제한
기타	▶한국정부의 한보철강 지원이 WTO와 한미철강 협정을 어겼는지 협의할 예정

III. 通商摩擦의 展望과 課題

○ (雙方의 立場)

- 미국은 대한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통상 압력을 늦출 수 없는 입장
 - 무역 집계 방식 차이로 한미간 무역역조에 대한 견해차 존재
 - Clinton 행정부는 의회의 자유무역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쌍무적 강경자세로 무역 흑자 유지할 필요
 - WTO와 OECD에서 소비 절약, 자동차 시장 문제 등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미국의 리더쉽 발휘 바람직함
 - 통신, 자동차는 미국내 관련 업계의 강력한 시장 개방 로비 분야
- 한국은 OECD 가입후 경제난과, 기존의 개방 일정, 대선 등의 이유로 통상압력에 굴복하기가 어려움
 - 통신 시장은 정책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분야이며 기본 통신 협정과 정보 기술 협정상의 개방 일정이 이미 제출된 상태
 - 96년 국내차 판매는 20.8% 감소했으나 수입차 판매는 9.3% 증가

○ (向後展望: 概觀)

- 한미 통상 현안은 쌍무적 차원 중심으로 다루어질 전망이고 소비절약 운동, 자동차, 통신, 지재권분야 순서로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優先順位 분야 전망)

- 소비절약운동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EU 중심의 쌍무적 협상주체나 OECD 및 WTO차원의 주제가 될 것임
- 지재권분야는 97년 4월 30일 관찰 대상국(WL)으로 하향되었으나 의약품의 시장 접근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될 것임
- 통신과 자동차분야는 의회 로비 압력도 가장 크고 미국내 경쟁 기업과 통상대표부에 의해 최우선 개방 대상국으로 한국이 이미 지명됨
- 통신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가장 통상 마찰이 크게 예상되는 분야이고, 자동차 시장 개방은 한국측의 명분이 희박하여 양보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분야

○ (對應課題)

-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소비 절약 운동이 수입 반대 운동이 아니라는 입장과 자유무역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필요함
 - 민간의 소비절약 운동을 정부가 묵인한다는 인상을 제거하고 소비절약 운동이 수입차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영향을 주지 못함을 강조
- 국내 통신, 자동차 시장에 개방 공세에 대비한 국내의 시장 전략의 수립 필요

1. 雙方의 立場

미국은 대내외적 환경이 통상 압력을 가중시켜야 하는 입장

○ 미국측의 對韓 通商 協商 立場

- 한국이 작년 대미 무역 적자를 115억불로 보는 반면 미국은 39억불로 집계하여 거의 1/3 수준으로 봄
- 집계차이는 수입액에 대한 FOB(본선 인도 가격) 방식과 CIF(도착항 인도 가격) 방식 차이임
- 1995년 대미 적자도 한국 집계가 33억불인 반면 미국 집계는 12억불 수준
- 90년~94년 사이 미국은 계속 대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 93년을 제외하고 대미 적자를 기록했다고 봄
- Clinton 행정부는 시장 개방이 견실한 성장과 고용 안정을 위해 핵심이라는 기본 통상 입장을 의회내 자유무역 비판론과 보호주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쌍무적 통상 압력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 다자간 체제에 참여하여 자국 보호주의를 약화하는 대신 그 손실은 쌍무적인 시장 개방에 의한 수출 증가로 보완될 수 있다는 입장
- 특히 다른 NAFTA 국가들에 대한 무역적자 지속으로 NAFTA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면서 자유무역의 손실보다는 시장 개방에 의한 수출 확대 이익이 큼을 과시해야 함
- EU등 선진국과 공동의 국제 통상 문제 해소를 위한 리더쉽을 유지하기 위해서 WTO나 OECD 레벨에서 개방 원칙과 룰을 예외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소비 절약 정책, 자동차와 같이 선진국 공동 불만 사항에 대해 미국의 리더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동 불만 사항 처리를 위한 대한 협상 리더쉽은 우선 직접적인 협상중 이익, 다음으로 다자 체제내의 정치적 이익이 있음
- 미국의 경우 EU보다 분야별로 더 집중적인 로비가 이

- 루어지고 있음
- 통신의 경우 전체적인 협상후 이익이 미국의 경우 EU 보다 더 큼
-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투자 대상국의 실질적 무역 및 투자 장벽 제거 필요
- 통신, 자동차등 강력한 로비 분야가 우선 협상 분야가 될 것임
- 최근 미국 자동차 3사는 한국이 가장 접근이 어려운 시장으로 선정
- GM의 회장이 정부에 한국 시장 문제를 직접 개진한 것으로 알려짐
- 단 개별 사안중 노동이나 한보문제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서는 압력을 강화하자는 의회내(민주당 의원 중심) 강경파와 국무성과 외교관련 실무자의 온건파 사이에 이견으로 통상문제가 급속히 표면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한국은 OECD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 경제난, 대선 등으로 통상압력에 굴복하기 어려움

- 한국측 對美 通商 協商 立場
- 대미 무역 역조 심화로 (96년 153억 불 전체 무역 적자중 115억 불) 더 이상의 시장 개방 진전에 부정적
- 대선을 앞두고 경제난에 처한 가운데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을 주기는 부담스러움
- 이는 OECD가입이 너무 빨랐다는 견해와 상승작용하여 정치적으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또 OECD 가입을 위한 시장 개방시 양허 스케줄을 최대한 허용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급속한 시장 개방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 정부가 소비 절약 운동에 관여한 적도 없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이유도 없음을 거듭 강조함
- 70년대 영국이나 80년대 미국도 각기 "Buy-British Campaign", "Buy-American Campaign"을 주도했음을 강조
- 통신 시장은 정책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분야이며 기

본 통신 협상, 정보 기술 협정상의 개방 일정이 이미 선 상태

- 96년 국내차 판매가 20.8%가 감소한 가운데 수입차 판매가 9.3% 증가했음을 강조
- 한보사태는 정치적 스캔달이지만 정부의 보조가 아니라 은행의 보조이고, 부도후 한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므로 문제가 없음
- 미국은 80년대 Chrysler를 살리기 위해 연방보조를 했음을 지적

2. 向後 展望 概觀

쌍무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며 우선 순위가 있는 분야만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WTO레벨보다는 쌍무적 협상을 통해 소비 절약 운동문제, 지적권, 통신, 자동차문제에 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
 - 미국이 쌍무적 압력에 대한 비난 때문에 WTO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나 사실 규명의 어려움과 기간 및 비용문제 때문에 우호적 타협을 통한 쌍무적 해결을 우선 도모함
- 우선 순위에 든 부문을 제외하면 예년보다 통상압력 약화 예상
 - 한국은 특히 지금까지 미국과 협상에서 통상압력에 쉽게 양보한 전례가 있고 능동적인 문제 제기나 통상문제 해결 의욕을 보이지 않았음
 - 협상과정에서는 경험적으로 미국측의 강력한 위협이 한국의 양허를 도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나 한국의 경제난과 정치적 입장을 고려, 미국측이 중도적인 선에서 한국의 양허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보 기술 협정, 기본 통신 협상 타결, OECD 가입 등 한국의 전반적인 개방 추세와 대미 무역 역조를 이유로 이전보다는 다소 협상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여건

- 그러므로 주요 사안들은 협상기한까지 쌍무협상이 정
체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임
- 그러나 미국측은 소비절약 운동, 자동차, 통신등 주요
부문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얻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임

3. 협상 優先順位 분야 전망

소비절약운동은 미
국과 EU중심으로
OECD나 쌍무적
협상 대상이 될 것
임

○ 반수입-소비절약운동

- 소비절약운동 내지 반 수입품 감정은 특히 자동차, 통
신, 농산물 등 미국의 수출품의 현재 판매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이는 또한 EU를 비롯한 OECD 내부에서도 가입 이전
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가장 지속적으로 문제시함
- 4월중 내한한 Renato Ruggiero WTO 사무총장도 한
국의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우려를 중심문제로 언급하
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단체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
- 최근 WTO 에서는 미국대표가 한국정부의 소비절약
운동에 관여한 증거를 가졌다고 발표하였고 EU는 거
듭해서 한국정부가 소비절약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
할 것을 요구
- 미국과 EU가 공동으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사실의
확인과 증거의 수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함
- 4월 24일 부터 개최된 OECD 무역위원회 본 회의, 4월
말 통산부 및 외무부의 성명과 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소비절약운동에 대한 관여 사실이 없고 반대를 표명할
수도 없음을 강조

○ 지재권

- Special 301 상 6년간 계속되는 PWL 지위가 97년 4월
30일의 한국 지위 검토에서 WL(Watch List)로 떨어져
그동안의 지재권 관련 기소등 개선 사항에 대한 긍정

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사업 기밀 보호와 검사 기준은 한국측이 이미 개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장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안으로 부각될 것임

통신분야와 자동차가 통상 마찰 가능성이 가장 크고 자동차분야가 우리측의 양보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

○ 통신

- 미통상법 1374조하의 통신관련 우선 협상국 지위와 미통상법 1377조하의 협상 대상국 4개국 지명으로 가장 압력이 강하게 예상됨
- 외국인 투자 지분의 확대, 입찰 및 조달 방식의 변화, 인허가 및 주과수 할당 과정의 개선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국측의 국내 산업 보호 의지와 명분이 가장 강한 분야이므로 통상 마찰 소지가 가장 많음

○ 자동차

- 수입품 안쓰기 운동, 수입차 리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히 1995 양해각서에 직접 배치되므로 이의 시정 요구
- 연내로 양해각서의 연장 또는 개정된 양해각서에서 결과 위주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 상승 요구, 실효관세 하향 요구 예상
- 이에 대한 한미 자동차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9월 말 이전에 「Super 301 협상 대상국」 지정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음
- 한국 자동차시장의 수입차 점유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통상압력에 대항할 명분이 가장 약하여 가장 양보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됨

○ 한보 지원 문제

- 정부는 한보 지원이 민간 은행 주도로 포철에 위탁 경영하는 방식임을 주장
- 또한 부도후 지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임을 강조

- 그러나 은행, 포철을 통한 보조금, 기술 지원 및 SOC 지원의 수혜자가 한보에 한정되어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특정 기업 지원임을 부인하기 어려움
- 포철의 경영 참여 때문에 포철이 한보와 관련회사로 간주되어 미국이 쌍무적 차원에서 포철 제품 및 포철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한보문제가 당장 쌍무적으로 문제가될 가능성은 희박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내에 의회내 강경파(민주당 의원 중심)와 외교 관련 행정부내의 온건파의 이견 때문에 급속하게 표면화할 문제는 아님
- WTO제소는 한국 정부가 개인적 이유가 아닌 정책적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
- 단 한보 지원 문제는 소비재 억제 정책과 연계되어 EU에 대한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에 악영향 가능성
- EU와는 작년 50억불 무역 흑자를 기록한 후, 가전제품을 둘러싼 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WTO 차원, OECD 차원에서 한국산 제품에 수입제한 및 상계관세의 구실 제공
- 또한 만약 WTO에 제소되면 한보지원금이 무역 왜곡을 일으키지 않음을 증명할 의무가 한보측에 있고 정부의 한보 보조 입장 표명이 기정 사실화 되어 불리함

4. 對應課題

정부는 OECD회원국 지위에 맞는 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상 관계를 수립해야 함

○ (수입정책)

- 단기 수입억제에 의해 경제난이나 무역 수지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특히 OECD 회원국 차원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회피해야 함
- 과거에도 무역 수지문제는 수입에 대한 억제보다는 구조 조정과 수출 활로 개척 등으로 극복되었으며 수입에 대한 억제는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미미함

- 제도적 수입장벽만 아니라 실질적 수입장벽이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입장이 없으면 OECD, WTO레벨의 장기적인 통상 전략상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WTO체제에서는 오히려 국제적 신뢰만 떨어뜨리는 것임

○ (통상일반)

- 정부는 국제 통상 체제에 부합하는 논리와 정책을 민간, 기업과 협력 수립해야 함
 - 현행 통상 관련 정책의 자의성 수정, 투명성 제고
 - 불필요한 비관세 장벽 제거 및 실질적 차별을 제거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미 통상에서 실질적 신뢰 구축 필요
 - 특히 금융개방과 투자자유화 기본 일정의 현실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미리 표명해야 함
- 통신 및 자동차 국내 시장에 대한 개방 가속화에 대비한 국내외 시장 전략과 진출 전략의 수립 필요
- 외국기업유치에 장애가 되는 한국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봉사 정신 제고, 반수입품 감정 해결,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투명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96년 본원에서 실시한 외국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의 관료적인 자세, 통관절차 등이 외국 기업에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음

○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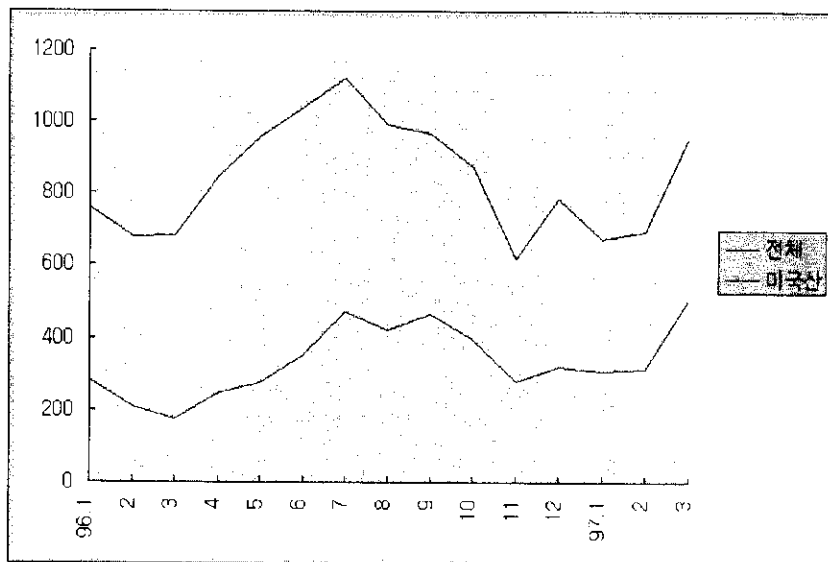
- 미국은 작년 여름 소비 절약 운동 이후 자동차수입이 점차로 감소했음을 이유로 소비 절약 운동이 주범이라고 보나 (<그림1> 참조) 누적적으로 보면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이 11월과 12월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으므로 (<표3> 참조) 소비 절약 운동의 수입차에 대한 효과는 미미함을 강조

<표3> 최근 수입차의 국내 시장 누적 점유율 추이

	수입차 전체 누적	국산차 국내 판매 누적	수입차 국내 시장 누적 점유율
96.1	761	104,218	0.72%
2	1438	182,988	0.78%
3	2119	279,144	0.75%
4	2965	385,533	0.76%
5	3921	495,876	0.78%
6	4961	593,520	0.83%
7	6082	692,432	0.87%
8	7072	780,927	0.90%
9	8038	866,605	0.92%
10	8911	958,343	0.92%
11	9529	1,070,933	0.88%
12	10315	1,204,352	0.85%
97.1	671	59,713	1.11%
2	1,363	139,839	0.97%
3	2,315	-	

자료: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그림1> 최근 자동차 수입 추이



(이세재, 박종훈)